

‘종편’ ‘일베’ 망발… 민·형사 소송 통해 철저히 책임 물어야

5·18 광주민중항쟁이 33주년을 맞았지만, 역사왜곡과 편파 행위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부 사이트에서 5·18 희생자를 ‘흉어’로 표현하는 등 악마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아 광주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경악·분노하게 했다.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북한군 개입’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보도로 5·18의 역사와 광주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시민의 공분을 샀다.

광주시와 5·18 관련단체, 정치권 등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그동안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일보는 전문가들로부터 5·18 역사왜곡 및 편파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과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들어봤다.

“5·18 정신 현법 전문에 넣고 ‘임을 위한…’ 공식 추모곡 지정”

조국 서울대 교수



있는데 이는 현행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다”며 “하지만, 5·18 특별법에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대한민국 혁법정신, 국가가 합의한 대한민국 이념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부정행위·모욕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올해 유독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왜곡이 심한데 대해 종편 채널탄생 등의 언론환경 변화와 보수 정권 재창출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꼽았다. 그는 “종편은 보수층 중심의 시청자를 충족시켜야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보수 진영이 재집권에 성공한 만큼 그 진영의 정서가 기쁨과 환호속에 기본적인 상식을 잊었다”고 비난한 뒤 “이번 5·18 민주화 운동 33주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정치권, 특히 범야권은 법률개정을 통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18 희생자에 대해 도가 지나치도록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는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새로 만들기 전에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관련 정부기관이 오히려 절상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제와 통제를 하면서 이런 악마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일베 사이트에서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통신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고 폐쇄할 수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행정적

조 교수는 최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한 역사왜곡과 모욕행위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그는 “5·18 희생자에 대한 모욕행위,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은 5·18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도에 대해 대책위를 구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5·18 왜곡보도 사과 않으면 TV조선 출연 재검토”

김한길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아닌 박근혜정부 문제”

민주당은 5·18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북한군 5·18 개입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출연 금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현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

18 민주화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도에 대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종편 채널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시 TV조선 출연을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우파들의 인식이 일제 강점기와 정신대에 대한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극우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5·18 왜곡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미방위에서는 편파·왜곡 방송 문제를,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

의 역사인식 부재와 비상식적 행태를 떠져 물을 것”이라며 “교문위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논란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끝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에 있다”면서 “보훈처장 개인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우리 당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분명한 법적 기준으로 강력 대처,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게”

임선숙 민변 자부장



뒤 곧바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임 민변 자부장은 일부 종편 출연자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만원씨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악의적인 것이고요. 분명한 법적 기준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범죄입니다.”

임선숙(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일부 보수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관련 광주시와 공조해법 지원팀 구성에 나섰다. 21일 집행부 모임에서 지원팀 구성을 논의한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철통같이 포위된 광주에 수백 명의 북한군 어떻게 들어오나”

새누리 유수택 최고·보수논객 조갑제도 5·18 왜곡 비난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대표적 우의 논객인 ‘조갑제 닷컴’ 조갑제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허위사실에 알려진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종편채널에서 ‘특수부대 600명

이 내려왔다. 무기를 훔쳐냈다’는 방송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광주시민 단 한 분도 믿을 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그 소요 속에서 강·절도가 없었고 (시민이) 간접용의자 2명을 불잡아 군부대에 이첩해졌다”며 북한개입설을 반박했다.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극우세력도 그 얘기를 갖고 광주시민과 그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도 지난 19일 조갑제 닷컴을 통해 “계엄령 아래 철통같이 포위된 광주에 수백 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오나? 북한군 수백 명이 죽었다는데 시신은 어디로 갔나?”고 밝혔다.

조 대표는 “광주사태를 목격했던 시민, 시위자, 진압군인, 취재기자들 가운데 북한군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가나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이는 전무(全無)하다”며 “일부 방송이 광주사태 시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나 서울 도심으로 장거리 땅굴을 파고 들어왔다는 주장을 겹증없이, 여과없이, 때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소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만평

- 김종득



앞으로 우릴 기억 못합니다

AIR dream
광주 MBC
스피치 아카데미

특별한 특별한 기회

광주 MBC 에어드림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이루십시오



박동찬
前 광주 MBC 아나운서
문화사업국장
琪서명대 겸임교수



양주아
前 부산 MBC 아나운서
琪서명대 겸임교수



황정숙
前 KBS 광주방송 작가 리포터
琪서명대 겸임교수



장문정
前 광주 MBC MC, 리포터
琪서명대 교통방송 MC



최이슬비
前 TBN 광주교통방송 MC
琪서명대 평생교육원
琪서명대 커뮤니케이션 강사



최인호
前 TBN 광주교통방송 MC
琪서명대 교통방송 리포터
琪서명대 평생교육원
琪서명대 커뮤니케이션 강사

방송진행자 | 일반인 스피치 | 방송구성작가 | 디베이트(토론) 교사 | 대학생 취업 면접 | 힐링스피치 클럽

교육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대의동, 현예종빌딩 3층) (주)밀과 사람 / 전화: 062-234-0800 / 팩스: 062-234-0801 / 홈페이지: www.lnhac.com